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이 실업에 미치는 영향*

채 구 목**

(원광대학교)

[요약]

본 연구는 OECD 18개국의 8년간(2000-2007년) 패널자료를 이용한 결합회귀분석에 의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본 후, 한국의 적극적노동시장정책 개선과 관련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했다.

분석결과,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은 실업률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둘째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세부 프로그램 중 직업훈련은 실업률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셋째 구직서비스와 고용보조는 부분적으로 실업률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적극적노동시장정책 개선과 관련된 시사점으로, 첫째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을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노동수요에 맞추어 체계화·전문화해야 하고, 셋째 고용보조의 경우 대체효과, 전치효과, 자중손실효과가 적도록 프로그램을 계획·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넷째 구직서비스의 경우 실업률 감소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재실업 예방, 소득불평등 완화, 생산성 향상 등을 고려한 정책을 개발·추진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실업률, 적극적노동시장정책, 구직서비스, 직업훈련, 고용보조

1. 서론

최근 고실업과 장기실업이 계속되면서 고용창출과 실업률 감소는 한국경제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¹⁾ 한국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실업률이 급격히 증가해 1998년 6.8%까지

* 본 논문은 2011년도 원광대학교 교비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원광대학교 평화연구소 연구위원.

1) 최근 한국의 실업률은 3-4%, 6개월 이상 장기실업률은 실업률의 10% 내외로 OECD 선진국들에 비해 실업률 및 장기실업률 모두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2009년 한국의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였으나, 외환위기를 극복하면서 낮아져 매년 3~4%의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다(통계청, 2011). 2009년 한국의 실업률은 3.6%로 OECD 주요 선진국들의 실업률에 비해 높지는 않은 편이나(통계청, 2011), 점차 선진국의 고실업 유형을 닮아가고 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재취업이 어렵고 실업이 장기화되면서 실업자 중 상당수가 비경제활동인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9년 한국의 비경제활동인구는 34.6%로 OECD 전체 국가들의 평균 29.3%보다 5.3%나 높은 수준이다(OECD, 2010). 따라서 통계상 실업률 3.6%에 OECD 평균 비경제활동인구 비율과의 차이 5.3%를 고려하면 2009년 한국의 실제 실업률은 3.6%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실업률은 통계상 실업률보다 훨씬 높다. 앞으로 한국경제는 지식정보산업 위주로의 급속한 변화, 인구의 노령화와 출산율 저하, 노동시장의 유연화, 경제성장률 둔화,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 저하 등으로 고실업률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한번 실업자가 된 사람들이 장기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로 전락하기 쉬운 상태이다.

이러한 고실업 및 장기실업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이 활용되고 있다. 특히 기술발달에 따른 자동화, 정보통신분야로의 산업구조 변화, 지구경제화에 따른 기업의 해외이전 등으로 지속력분야나 제조업분야의 일자리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이들 산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새로운 성장산업에서 재취업을 하도록 도움을 주는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은 매우 초보적인 수준이다. 2008년 한국의 GDP 대비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지출 비율은 0.20%로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OECD 18개 국가들의 평균 0.67%보다 0.47%나 낮은 수준이며, 한국의 실업률 1%당 GDP 대비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지출 비율도 0.0625%로 OECD 18개 국가들의 평균 0.1364%보다 0.0739%나 낮은 수준이다(OECD, 2011).

서구 선진국의 경우 1970년대 이래 만성적인 고실업과 장기실업이 증가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이 도입되었다. 특히 1980년대 유럽 대부분 국가들이 높은 실업률을 경험한 것에 반해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을 추진한 스웨덴이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자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이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Calmfors, 1993: 25). 이에 따라 1980년대 이후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은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을 도입하기 시작했으며 재정지출을 늘렸다.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은 크게 세 분야로 구분되는데, 첫째는 구직과 구인의 연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직업알선 등의 구직서비스(employment service), 둘째는 새로운 일자리에 맞게 노동력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직업훈련

OECD 평균보다 5.3%나 더 높은 편이다. 비경제활동인구가 많다는 것은 노동자들이 노동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쉽게 직업을 얻을 수 없거나 이익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실업급여 최대 지급기간은 8개월이나 실제 평균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114일(3.8개월)로 선진국에 비해 매우 짧은 실정이다(채구묵, 2011: 14). 한국의 경우 취업의사와 일할 능력은 있으나 노동시장적 사유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자는 구직단념자로 인정되어 비경제활동인구로 취급된다. 이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이 만료된 실업자가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될 확률이 높아져 비경제활동인구는 많아지고 실업률과 장기실업률은 낮아진다. 그러나 선진국과 같이 노동시장적 여건(소극적 및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좋아진다면 비경제활동인구는 줄어들고 실업률과 장기실업률이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실제 실업률 및 장기실업률은 공식적으로 제시되는 것보다 상당히 더 높은 실정이다.

(vocational training), 셋째는 일자리 창출(공공부분의 직접적 일자리창출 및 민간부분의 임금보조를 통한 일자리창출)을 위한 고용보조(employment subsidy)이다. 이외에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두 프로그램은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세 가지 프로그램 위주로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적극적노동정책이 실행되면서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 실업감소 효과 또는 고용촉진 효과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이 실업감소(또는 고용증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 상반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어떤 연구들은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이 실업률 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 반면(Jackman, Pissarides and Savouri, 1990; Layard, Nickell and Jackman, 1991; Nickell, 1997; Layard, 1997; Estevao, 2007; 강철희·김교성·김영범, 2001; 김형기, 2008), 다른 연구들은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이 실업률 감소에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Calmfors, 1993; Skedinger, 1994; Regner, 1997). 한편 여러 연구들은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 세부 프로그램인 구직서비스, 직업훈련, 고용보조가 실업률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는데, 연구에 따라 각각 다른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Calmfors, 1994; Calmfors and Skedinger, 1995; Carling and Richardson, 2004; Estevao, 2007; 강철희 외, 2001). 이렇게 연구에 따라 상반된 결과가 제시되는 이유는, 첫째 분석대상 국가와 시기(기간)가 다르고, 둘째 분석에 사용한 통제변수가 다르며, 셋째 각국의 특수한 상황이 통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OECD 18개국의 8년간(2000년-2007년) 자료를 이용한 결합회귀분석(pooled cross-section time-series analysis)에 의해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이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다른 연구와의 차별성 및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OECD 국가들 중 유사한 경제적 상황(1인당 GDP가 3만 달러 이상)을 갖고 있으며, 필요한 변수들에 대한 자료수집이 가능한 18개 국가를 분석대상으로 했으며, 둘째, 가능한 한 최근의 긴 시계열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최근 8년(2000년-2007년)을 분석대상으로 했고, 셋째, 통제변수로 기존 연구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경제성장률, 임금인상률, 물가상승률, 노동조합조직률, 실업급여 및 실업부조 외에 시기별 특수 상황을 통제하기 위한 시간더미변수, 국가별 특수 상황을 통제하기 위한 국가더미변수를 사용했고, 넷째,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전체뿐만 아니라 세부 프로그램인 구직서비스, 직업훈련, 고용보조가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한국의 적극적노동시장정책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기존연구 검토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은 주로 구직서비스, 직업훈련, 고용보조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들 프로그램들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Calmfors and Skedinger, 1995: 3-4; 강철희 외, 2001: 10-11; 정희정, 2005: 68). 첫째는 예방적인 것으로 실업으로의 이행을 방지하는 것이다. 즉 기존 취업자의 실업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기후퇴 시 기업에게 임금, 직업훈련비용 등에 대한 보조

를 제공함으로써 고용을 유지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둘째는 일단 실업자가 된 사람들을 가능한 한 빨리 재취업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즉 노동시장에서 노동수요에 맞추어 노동공급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 마찰적, 구조적 실업을 극복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실업자들에게 직업교육훈련이나 구직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고용보조를 통한 일자리창출을 통해 고용을 촉진한다.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이 실업률 감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먼저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실증적인 선행연구들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론적 배경 중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이 실업률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OECD, 1993: 46-47; Calmfors, 1994: 13-18; Calmfors and Skedinger, 1995: 5-7; Estevao, 2007: 115; 강철희 외, 2001: 10-11). 첫째, 직업훈련을 통해 노동수요에 맞는 기술수준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또는 구직서비스를 통해 구직의 효과성을 높임으로써 구인과 구직과의 일치도를 높인다. 구인과 구직의 일치도 증가를 통한 빈 일자리와 실업 간의 간격 축소는 임금압력을 감소시키고 임금을 하락하도록 한다. 한편 사용자에게 빈 일자리를 채우는데 드는 비용을 감소하도록 하기 때문에 노동수요를 증가시킨다. 즉 빈 일자리 외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한다. 구인과 구직의 일치도 증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 효과에 의해 고용이 증가된다. 둘째, 직업훈련 또는 현장훈련을 통해 노동력의 생산성을 증가시켜 고용과 임금의 증가를 가져오게 한다. 셋째, 실업자들을 노동과 접촉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숙련박탈을 저지하고 노동력을 유지하도록 한다. 그 결과 실업자들은 구직활동에 계속해서 참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구직경쟁의 증가는 임금을 낮추도록 하기 때문에 고용을 증가시킨다. 넷째, 직접적 일자리 창출, 고용보조는 대체효과나 전체적인 노동비용 감소를 통해 고용을 증가시킨다. 사용자들은 임금이 높은 노동자들을 고용보조를 받는 낮은 임금자로 대체할 것이며, 이로 인해 구직경쟁이 증가될 것이다. 고용보조 및 구직경쟁의 증가는 전체적인 노동비용을 감소시켜 고용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주장과 달리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이 실업률 감소에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OECD, 1993: 47; Calmfors and Skedinger, 1995: 6-8; Estevao, 2007: 115; 강철희 외, 2001: 11; 박준식·김영범, 2009: 209-210). 첫째,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 참여가 실업자들에게 복지혜택을 연장시켜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은 실업률 감소에 효과가 없다. 적극적노동시장정책에의 참여를 조건으로 한 높은 보상수준은 실직 시 복지손실 및 소득 억제요인을 감소시켜 구직활동의 적극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²⁾ 따라서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은 고용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실업자들을 훈련프로그램에 가두어 놓기 때문에 이들의 구직활동에 대해 속박효과(lock-in effect)를 갖는다. 즉 직업훈련 참여기간 동안 실직자들의 구직활동이 감소되기 때문에 실업률을 감소시키지 못한다. 셋째,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 고용보조 프로그램은 대체효과(substitution effect), 전치

2)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참여를 조건으로 복지혜택을 연장시켜 주거나 새로운 복지혜택을 제공해 줌으로써 복지손실 및 소득감소를 완화시켜 준다는 의미이며, 이러한 혜택이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도록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효과(displacement effect), 자중손실효과(deadweight loss effect)로 인해 실업률을 감소시키지 못한다. 대체효과란 기존의 피고용자를 사용자가 임금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실업자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하며, 전치효과란 임금보조를 받는 실업자들을 고용할 경우 생산비용이 감소되어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산업이나 기업 제품의 판매 감소를 초래해 고용이 감소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자중손실효과란 고용보조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아도 취업이 가능한 실업자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비용의 손실을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 구직서비스 프로그램은 실업자들의 재취업을 촉진시키지만, 대부분 근로조건이 열악한 일자리에 취업하도록 함으로서 재실업을 유발하도록 한다. 따라서 장기적인 면에서 구직서비스 프로그램은 실업률 감소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이 실업률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실증적인 연구도 각각 다른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라야드·닉켈·잭맨(Layard, Nickell and Jackman, 1991)은 OECD 19개국의 1983년-1988년 간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지출 평균이 실업률 평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이 연구는 노동조합의 상호조정능력(union coordination), 사용자의 상호조정능력(employer coordination), 실업급여기간,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replacement rate), 물가상승률을 통제변수로 사용한 상태에서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이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는데, 연구결과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이 실업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기구(OECD, 1993)는 OECD 21개국의 1985년과 1990년간의 실질경제성장률(real GDP) 변화, 실질임금 변화, 경제성장률 변화와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지출 변화의 상호작용(경제성장률 변화×적극적노동시장정책 지출 변화)을 통제된 상태에서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지출 변화가 고용률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지출 변화는 고용률 변화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제성장률 변화와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지출 변화의 상호작용은 고용률 변화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지출 변화가 고용률 변화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고용이 증가할 때는 정부가 적극적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지출을 감소시키는 반면, 고용이 감소할 때는 지출을 증가시키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다. 한편 경제성장률 변화와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지출 변화의 상호작용이 고용률 변화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제성장률이 상승하는 시기에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지출이 더 증가하는 국가에서 고용 증가율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직업훈련 지출 변화, 직업훈련과 구직서비스를 합한 지출 변화도 고용률 변화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제성장률 변화와 이들 변화의 상호작용은 고용률 변화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잭맨·피사리데스·사보우리(Jackman, Pissarides and Savouri, 1990)는 OECD 14개국의 18년간(1971년-1988년) 자료를 이용하여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이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실업급여기간, 실업급여 소득대체율, 노사협력, 시간더미 등을 통제변수로 사용한 분석에서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이 실업률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다.

닉켈(Nickell, 1997)의 연구는 OECD 20개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실업률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으로,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이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었다. 그러나 연구결과 통제변수로 사용된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지출이 실업률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스테바오(Estevao, 2007)는 OECD 15개국의 8년간(1993년-2000년) 자료를 이용한 결합회귀분석(pooled time-series cross-section analysis)에 의해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이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소극적노동시장정책,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 노동조합조직률, 고용보호(employment protection), 노사협상능력(bargaining coordination), 조세, 시간더미, 국가더미를 통제변수로 사용했는데, 분석결과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이 고용률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업훈련, 고용보조가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직업훈련은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정적으로, 고용보조는 유의미하게 정적으로 고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캄포스와 스캐딘거(Calmfors and Skedinger, 1995)는 스웨덴 24개 지역의 1966년-1990년 자료를 이용한 결합회귀분석에 의해 일자리창출 프로그램, 직업훈련이 실업률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국가전체 실업률, 시간더미, 지역더미를 통제변수로 사용했는데, 분석결과 직업훈련은 실업률을 감소하도록 영향을 미치나, 일자리창출은 실업률을 증가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창출이 실업률을 증가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이유에 대해 대체효과가 크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다. 한편 전체적으로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이 실업률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캄포스(Calmfors, 1994)는 구인·구직일치도, 노동인구(labor force), 구직자의 경쟁상태, 대체 및 자중손실, 복지손실감소(reduced welfare loss),³⁾ 생산성, 고용능력 테스트 등이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구인·구직일치도, 구직자의 경쟁상태, 생산성, 고용능력 테스트(work test)는 고용률을 증가하도록, 노동인구(labor force), 대체 및 자중손실, 복지손실감소는 고용률을 감소하도록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캄포스(Calmfors, 1994)는 스웨덴과 다른 서구 국가들(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이태리, 뉴질랜드, 영국, 서독)의 비교를 통해 다른 선행연구들과 상반된 설명을 하고 있다. 즉 다른 선행연구들은 1980년대 스웨덴이 다른 서구국가들과 달리 낮은 실업률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을 추진했던 점과 중앙집권적 노사협상(centralized bargaining)⁴⁾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캄포스는 그러한 설명이 과대평가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 확장은 고용증가보다는 인플레이션 또는 실질임금 인상을 초래하며, 이로 인해 실업률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스웨덴이 1980년대 낮은 실업률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실업급여 기간이 길지 않은 제도, 낮은 환률 등 다른 거시정책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이 실업률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국내연구로 강철희 외(2001)의 연구

3)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참여 시 소득보상제도(income compensation)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혜택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손실이 줄어드는 정도를 의미한다.

4) 스웨덴은 노동자대표와 사용자대표가 임금협상을 통해 같은 산업·직종의 근로자는 같은 임금을 받도록 하는 임금협상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를 임금연대정책이라고도 한다.

외에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강철희 외는 OECD 8개국의 1986년-1992년 자료를 이용한 결합회귀분석에 의해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지출 변화 및 세부 프로그램인 직업훈련, 고용보조, 구직서비스 지출 변화가 실업률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실질임금 변화율, GDP 변화율, 소비자물가 상승률, 노동조합 조직률 변화, 실업급여 수혜액 변화, 실업급여 수혜액 변화와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지출 변화의 상호작용을 통제변수로 사용했는데, 연구결과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이 실업률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부 프로그램의 경우 구직서비스는 실업률을 감소하도록, 고용보호는 실업률을 증가하도록, 직업훈련은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실업률을 감소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실업급여 수혜액 변화는 실업률을 증가하도록 영향을 미치나, 실업급여 수혜액 변화와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지출 변화의 상호작용은 실업률을 감소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업급여를 적극적노동시장정책과 병행해서 실시하면 실업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이 실업률 감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론적 배경에서 다른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실증적 연구 또한 사용한 자료에 따라 다른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실증적 연구에서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은 실업률 감소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적 선행연구 검토결과 경제성장률, 임금인상률, 소비자물가상승률, 노동조합조직률, 고용보호, 실업급여 및 실업부조 등을 통제변수로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연구에 따라 독립변수와 통제변수 간의 상호작용을 독립변수로 사용하고 있고, 결합회귀분석의 경우는 시간더미, 국가더미를 통제변수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성장률은 실업률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임금인상률, 소비자물가상승률, 노동조합조직률, 고용보호, 실업급여 및 실업부조는 실업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⁵⁾ 한편 결합회귀분석의 경우는 시간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특수한 상황과 각국의 특수한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시간더미와 국가더미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18개국의 8년간(2000년-2007년) 패널자료를 이용한 결합회귀분석을 통해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이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며, 통제변수로 경제성장률, 임금인상률, 물가상승률, 노동조합조직률, 실업급여 및 실업부조, 시간더미, 국가더미를 사용하고자 한다.

5) 임금상승은 생산제품의 가격 상승을 초래해 판매 감소를 야기하기 때문에 고용을 감소시킨다고 주장되고 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고용을 감소시킨다는 것은 필립스곡선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필립스곡선은 실업률 저하를 위해서는 물가상승을 감수해야 하고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실업률 상승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으로 완전고용과 물가안정의 2가지 경제정책 목표 사이에 모순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선진국에서 인플레이션 아래 실업이 존재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양상이 나타나 필립스곡선이 맞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노동조합조직률은 임금인상과 노동이동의 경직성을 초래해 고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시되고 있다. 고용보호는 한편으로는 노동의 유연성을 약화시켜 고용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해고방지 등을 통해 실업을 방지할 수 있다. 실업급여 및 실업부조가 관대하면 노동자의 근로의욕을 약화시켜 실업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3. 분석자료 및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18개국의 8년간(2000년-2007년) 자료, 총 144사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대상으로 OECD 국가 중 1인당 GDP가 3만 달러 이상이며, 분석에 사용된 모든 변수들의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국가를 선정하였다. 1인당 GDP가 3만 달러 이상인 국가로 한정된 이유는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이 실업률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경제상황을 가진 국가들을 분석대상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분석기간은 2000년부터 2007년까지 8년간으로, 가장 최근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면서 가능한 한 장기간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독립변수, 종속변수, 통제변수에 관한 모든 자료는 OECD 홈페이지(<http://www.oecd.org>, 2011)의 OECD *StatExtracts*를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2) 변수의 정의 및 계측

(1) 독립변수

독립변수로 ①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지출과 ② 세부 3개 프로그램인 구직서비스 지출, 직업훈련 지출, 고용보조 지출이 사용되었다.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지출은 실업률 1%당 GDP 대비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지출 비율을 사용하였다. 즉 GDP 대비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지출 비율을 실업률로 나눈 비율을 사용하였다. 이는 실업률이 높은 국가는 다른 조건이 일정하더라도 실업률이 낮은 국가에 비해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지출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구직서비스 지출, 직업훈련 지출, 고용보조 지출도 실업률 1%당 GDP 대비 각각의 지출 비율을 사용하였다.

(2) 종속변수

종속변수로 ① 실업률과 ② 6개월 이상 장기실업률을 사용하였다. 실업률은 실업자 수를 경제활동인구(15세-64세)로 나누어 100을 곱한 것을 사용하였다. 6개월 이상 장기실업률은 각국의 실업률에 실업자 중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비율을 곱해서 구하였다. 장기실업률을 실업자 중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비율로 계산할 수도 있으나, 경제활동인구 대비 장기실업자 비율을 이용하는 것이 한 국가의 장기실업률 상태를 더 잘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실업률에 장기실업률을 곱한 것을 사용하였다.

시계열자료 분석 시 종속변수에 관한 자료는 독립변수보다 한해 늦은 연도의 자료를 많이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도 종속변수인 실업률 및 장기실업률을 독립변수보다 한해 늦은 연도, 즉 2001년부터 2008년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3) 통제변수

통제변수로 경제성장률, 임금인상률, 물가상승률, 노동조합조직률, 실업급여 및 실업부조, 국가더미, 시간더미를 사용하였다.

① 경제성장률

경제성장률은 실질 GDP 성장률을 사용하였다.

② 임금인상률

각국의 연 평균 임금은 국가별 구매력 차이를 표준화하기 위해 미국달러 구매력으로 동등화한 2008년 기준(2008 USD purchasing power parities and 2008 constant price)으로 계산한 금액을 사용하였다. 임금인상률은 해당연도 평균임금에서 전연도 평균임금을 뺀 값을 전연도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구하였다.

③ 물가상승률

물가상승률로 연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사용하였다.

④ 노동조합조직률

노동조합조직률은 전체노동자 대비 노동조합 가입자 비율, 즉 노동조합 가입자를 전체 노동자로 나눈 값을 사용하였다.

⑤ 실업급여 및 실업부조

실업률 1%당 GDP 대비 실업급여 및 실업부조 지급액 비율을 사용하였다.

⑥ 시간더미 및 국가더미

시간에 따른 특수한 상황과 각국의 특수한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시간더미와 국가더미를 사용하였다.

3) 분석방법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이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결합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Y_{it} = a + b_1 ALMP_{it} + b_2 X_{it} + b_3 Z_t + b_4 C_i + e_{it}$$

여기서 Y =실업률 또는 장기실업률, i =국가, t =연도, $ALMP$ (active labour market policy)=실업률 1%당 GDP 대비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지출 비율, X =통제변수(경제성장률, 임금인상률, 물가상승률, 노동조합조직률, 실업률 1%당 실업급여 및 실업부조), Z =연도더미, C =국가더미, e =오류

4.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지출, 실업률 및 통제변수들의 실태

1)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지출

각국의 연도별 실업률 1%당 GDP 대비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지출 비율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실업률 1%당 GDP 대비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지출 비율은 GDP 대비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지출 비율을 실업률로 나눈 것이다.

<표 1> 각국의 실업률 1%당 GDP 대비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지출 비율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평균
호주	0.0587	0.0515	0.0531	0.0593	0.0704	0.0740	0.0688	0.0682	0.0630
오스트리아	0.1444	0.1611	0.1333	0.1465	0.1245	0.1212	0.1532	0.1545	0.1423
벨기에	0.1681	0.1758	0.1382	0.1317	0.1262	0.1306	0.1386	0.1627	0.1465
캐나다	0.0588	0.0583	0.0506	0.0500	0.0500	0.0471	0.0492	0.0483	0.0516
덴마크	0.4395	0.4133	0.4087	0.3278	0.3091	0.3292	0.3872	0.3421	0.3696
핀란드	0.0927	0.0912	0.0901	0.1000	0.1090	0.1096	0.1182	0.1261	0.1046
프랑스	0.1322	0.1386	0.1291	0.1167	0.1033	0.0957	0.1000	0.1084	0.1155
독일	0.1640	0.1605	0.1476	0.1258	0.1092	0.0840	0.0878	0.0857	0.1206
아일랜드	0.1929	0.2225	0.1800	0.1543	0.1489	0.1455	0.1378	0.1391	0.1651
이태리	0.0653	0.0791	0.0930	0.0929	0.0788	0.0740	0.0735	0.0738	0.0788
일본	0.0596	0.0580	0.0537	0.0566	0.0574	0.0568	0.0463	0.0410	0.0537
네덜란드	0.4900	0.5654	0.5065	0.3659	0.2765	0.2453	0.2744	0.3000	0.3780
노르웨이	0.1906	0.1853	0.1865	0.1881	0.1814	0.1644	0.1706	0.2154	0.1853
스페인	0.0712	0.0712	0.0649	0.0640	0.0708	0.0783	0.0859	0.0880	0.0743
스웨덴	0.3125	0.2814	0.2633	0.1894	0.1649	0.1675	0.1915	0.1836	0.2193
스위스	0.2240	0.2364	0.2069	0.1846	0.1878	0.1786	0.1737	0.1735	0.1957
영국	0.0444	0.0640	0.0549	0.0880	0.0979	0.0938	0.0593	0.0604	0.0703
미국	0.0425	0.0362	0.0276	0.0250	0.0255	0.0255	0.0283	0.0283	0.0298
합계	0.1640	0.1694	0.1549	0.1370	0.1273	0.1234	0.1302	0.1333	0.1424

8년(2000년-2007년) 평균 실업률 1%당 GDP 대비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지출 비율이 높은 국가는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노르웨이 등이며, 낮은 국가는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영국 등이다.

실업률 1%당 GDP 대비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지출 비율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합계참조), 2000년에서 2001년까지 약간 증가했다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감소했으며, 2005년 이후에는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각국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특히 2000년과 2007년을 비교해보면),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독일 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업률 1%당 GDP 대비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지출 비율이 감

소했으나, 호주,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페인, 영국 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체로 실업률 1%당 GDP 대비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지출 비율이 높은 국가들의 경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지출 비율이 낮은 국가들의 경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각국의 실업률 1%당 GDP 대비 각 프로그램별 지출 비율은 지면관계상 8년(2000년-2007년) 간의 모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8년 평균만 제시하였다(〈표 2〉).

〈표 2〉 각국의 실업률 1%당 GDP 대비 각 프로그램별 지출 비율(%) (2000-2007년 평균)

	구직서비스		직업훈련		고용보조	
	GDP 대비	적극적노동정책 총지출 대비	GDP 대비	적극적노동정책 총지출 대비	GDP 대비	적극적노동정책 총지출 대비
호주	0.0345	54.76	0.0018	2.86	0.0218	34.66
오스트리아	0.0366	25.72	0.0718	50.46	0.0328	23.05
벨기에	0.0247	16.86	0.0238	16.25	0.0931	63.55
캐나다	0.0257	49.81	0.0128	24.81	0.0052	10.08
덴마크	0.0655	17.72	0.1262	34.15	0.1176	31.82
핀란드	0.0190	18.16	0.0434	41.49	0.0256	24.47
프랑스	0.0243	21.04	0.0346	29.96	0.0556	48.14
독일	0.0281	23.30	0.0465	38.56	0.0263	21.81
아일랜드	0.0290	17.57	0.0576	34.89	0.0766	46.40
이태리	0.0111	14.09	0.0267	33.88	0.0351	44.54
일본	0.0407	75.79	0.0083	15.46	0.0047	8.75
네덜란드	0.1260	33.33	0.0323	8.54	0.1881	49.76
노르웨이	0.0339	18.29	0.0932	50.30	0.0506	27.31
스페인	0.0107	14.40	0.0160	21.53	0.0406	54.64
스웨덴	0.0364	16.60	0.0685	31.24	0.1011	46.10
스위스	0.0362	18.50	0.0681	34.80	0.0899	45.94
영국	0.0585	83.21	0.0054	7.68	0.0064	9.10
미국	0.0071	23.83	0.0106	35.57	0.0020	6.71
평균	0.0360	30.17	0.0415	28.47	0.0541	33.16

주: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총지출 대비 구직서비스 지출 비율, 직업훈련 지출 비율, 고용보조 지출 비율을 합해서 100%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청년층을 위한 지출, 장애인을 위한 지출 등이 있는 국가들의 경우 이 지출액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임.

구직서비스를 살펴보면, 실업률 1%당 GDP 대비 구직서비스 지출 비율이 높은 국가는 네덜란드, 덴마크, 영국, 일본, 스웨덴 등이며, 비율이 낮은 국가는 미국, 스페인, 이태리, 핀란드 등이다.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총지출 대비 구직서비스 지출 비율이 높은 국가는 영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이며, 비율이 낮은 국가는 이태리, 스페인, 스웨덴, 벨기에, 아일랜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위스 등이다. 영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은 실업률 1%당 GDP 대비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지출 비율은 낮으나(〈표 1〉) 적극적노동시장정책 대비 구직서비스 비율은 높다. 즉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지는

않지만 구직서비스에 비중을 두어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등은 실업률 1%당 GDP 대비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지출 비율은 높으나(〈표 1〉) 적극적노동시장정책 대비 구직서비스 비율은 낮다. 즉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나 구직서비스에 크게 비중을 두고 있지 않다.

직업훈련을 살펴보면, 실업률 1%당 GDP 대비 직업훈련 지출 비율이 높은 국가는 덴마크,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스웨덴, 스위스 등이며, 비율이 낮은 국가는 호주, 영국, 일본, 미국, 캐나다 등이다.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총지출 대비 직업훈련 지출 비율이 높은 국가는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핀란드, 독일, 미국, 아일랜드, 스위스, 덴마크 등이며, 비율이 낮은 국가는 호주, 영국, 네덜란드, 일본, 벨기에 등이다. 일반적으로 실업률 1%당 GDP 대비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지출 비율이 높은 국가는(〈표 1〉)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지출 대비 직업훈련 지출 비율도 높고, 실업률 1%당 GDP 대비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지출 비율이 낮은 국가는(〈표 1〉)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지출 대비 직업훈련 지출 비율도 낮다. 즉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은 직업훈련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반면,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지 않는 국가들은 직업훈련에 크게 비중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미국은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지 않으면서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지출 대비 직업훈련 지출 비율이 높고, 네덜란드는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면서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지출 대비 직업훈련 지출 비율이 낮다.

고용보조를 살펴보면, 실업률 1%당 GDP 대비 고용보조 지출 비율이 높은 국가는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벨기에, 스위스 등이며, 비율이 낮은 국가는 미국, 일본, 캐나다, 영국 등이다.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총지출 대비 고용보조 지출 비율이 높은 국가는 벨기에,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 아일랜드, 스웨덴, 스위스 등이며, 비율이 낮은 국가는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등이다.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벨기에, 스위스 등은 실업률 1%당 GDP 대비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지출 비율이 높으면서(〈표 1〉)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대비 고용보조 비율도 높고, 미국, 일본, 캐나다, 영국 등은 실업률 1%당 GDP 대비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지출 비율이 낮으면서(〈표 1〉)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대비 고용보조 비율도 낮다. 다시 말해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은 고용보조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반면,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지 않는 국가들은 고용보조에 크게 비중을 많이 두고 있지 않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일반적으로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은 직업훈련과 고용보조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반면,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지 않는 국가들은 구직서비스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박준식·김영범(2009)의 연구결과와 대체로 일치한다. 다만 미국은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지 않으면서 직업훈련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고, 네덜란드는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면서 직업훈련보다는 구직서비스와 고용보조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다.

2) 실업률

각국의 연도별 실업률은 <표 3>과 같다. 실업률은 종속변수로 독립변수보다 1년 늦은 연도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2001년-2008년 실업률을 정리하였다.

8년(2001년-2008년) 평균 실업률이 높은 국가는 스페인, 독일, 프랑스, 벨기에, 이태리 등이며, 실업률이 낮은 국가는 스위스, 노르웨이,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이다.

실업률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합계참조), 2001년부터 2004년까지는 조금씩 증가한 후, 2004년부터 2007년까지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07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각국의 연도별 실업률 추이를 살펴보면(특히 2000년과 2007년을 비교해보면), 호주, 핀란드, 이태리 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업률이 감소했으나, 아일랜드, 스위스, 스페인, 미국 등은 시간이 지남(특히 2000년과 2007년 사이)에 따라 실업률이 증가했다. 한편 대부분 국가들의 경우는 연도별 평균(합계부분)과 같은 추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일랜드, 스페인, 미국 등은 2008년 외환위기 및 서브프라임 등의 영향으로 실업률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약간 더 높게 증가했다.

<표 3> 각국의 연도별 실업률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평균
호주	6.8	6.4	5.9	5.4	5.0	4.8	4.4	4.2	5.36
오스트리아	3.6	4.2	4.3	4.9	5.2	4.7	4.4	3.8	4.39
벨기에	6.6	7.6	8.2	8.4	8.5	8.3	7.5	7.0	7.76
캐나다	7.2	7.7	7.6	7.2	6.8	6.3	6.0	6.1	6.86
덴마크	4.5	4.6	5.4	5.5	4.8	3.9	3.8	3.4	4.49
핀란드	9.1	9.1	9.1	8.9	8.3	7.7	6.9	6.4	8.19
프랑스	8.3	8.6	9.0	9.2	9.3	9.2	8.3	7.8	8.71
독일	7.6	8.4	9.3	9.8	10.6	9.8	8.4	7.3	8.90
아일랜드	4.0	4.5	4.6	4.5	4.4	4.5	4.6	6.4	4.69
이태리	9.1	8.6	8.5	8.0	7.7	6.8	6.1	6.8	7.70
일본	5.0	5.4	5.3	4.7	4.4	4.1	3.9	4.0	4.60
네덜란드	2.6	3.1	4.1	5.1	5.3	4.3	3.6	3.1	3.90
노르웨이	3.4	3.7	4.2	4.3	4.5	3.4	2.6	2.5	3.58
스페인	10.4	11.1	11.1	10.6	9.2	8.5	8.3	11.4	10.07
스웨덴	5.9	6.0	6.6	7.4	7.7	7.1	6.1	6.2	6.63
스위스	2.2	2.9	3.9	4.1	4.2	3.8	3.4	3.2	3.46
영국	5.0	5.1	5.0	4.7	4.8	5.4	5.3	5.6	5.11
미국	4.7	5.8	6.0	5.5	5.1	4.6	4.6	5.8	5.26
합계	5.89	6.27	6.56	6.57	6.43	5.96	5.46	5.61	6.09

한편 각국의 6개월 이상 장기실업률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8년(2001년-2008년) 평균 장기실업률이 높은 국가는 독일, 스페인, 이태리, 프랑스, 벨기에 등이며, 장기실업률이 낮은 국가는 노르웨이,

미국, 캐나다, 덴마크, 호주, 스위스 등이다. 대체로 실업률이 높은 국가들이 장기실업률도 높으며, 실업률이 낮은 국가들이 장기실업률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은 실업률이 낮지 않으나 장기실업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실업률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합계참조), 2001년부터 2004년까지는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04년부터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6개월 이상 장기실업률은 대체로 실업률과 같은 연도별 추이를 보이고 있다.

각국의 연도별 장기실업률추이를 살펴보면, 호주, 캐나다, 핀란드, 이태리 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장기실업률이 감소했으나, 다른 국가들의 경우는 대체로 연도별 평균(합계부분)과 같은 추이를 보이고 있다.

〈표 4〉 각국의 연도별 6개월 이상 장기실업률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평균
호주	2.49	2.32	2.07	1.81	1.54	1.48	1.19	1.12	1.75
오스트리아	1.30	1.41	1.76	2.27	2.25	2.08	1.94	1.61	1.83
벨기에	4.39	4.90	5.13	5.42	5.68	5.41	4.88	4.30	5.01
캐나다	1.21	1.42	1.39	1.27	1.16	1.01	0.89	0.89	1.16
덴마크	1.73	1.59	2.20	2.24	1.92	1.34	1.06	0.76	1.61
핀란드	3.84	3.79	3.77	3.63	3.47	3.06	2.62	2.02	3.27
프랑스	4.75	4.60	5.45	5.58	5.62	5.61	4.86	4.34	5.10
독일	5.03	5.45	6.37	6.62	7.35	6.99	5.86	4.86	6.07
아일랜드	2.01	2.21	2.41	2.41	2.21	2.29	2.19	2.92	2.33
이태리	7.04	6.46	6.26	4.99	4.94	4.32	3.71	4.07	5.22
일본	2.31	2.65	2.69	2.35	2.16	1.98	1.88	1.88	2.24
네덜란드	1.30	1.32	1.97	2.83	3.17	2.58	2.01	1.55	2.09
노르웨이	0.55	0.74	0.86	1.09	1.14	1.12	0.67	0.46	0.83
스페인	6.43	6.57	6.62	6.15	4.39	3.77	3.54	4.59	5.26
스웨덴	2.17	2.17	2.34	2.76	2.26	1.97	1.66	1.61	2.12
스위스	1.04	1.08	1.86	2.21	2.48	2.23	1.92	1.58	1.80
영국	2.18	1.85	1.80	1.70	1.78	2.14	2.12	2.25	1.98
미국	0.55	1.06	1.32	1.20	1.00	0.81	0.81	1.14	0.99
합계	2.80	2.87	3.13	3.14	3.03	2.79	2.43	2.33	2.81

3) 통제변수

통제변수들의 경우 지면관계상 8년(2000년-2007년) 간의 모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8년 평균만 기술하였다. 각국의 8년 평균 GDP성장률, 임금인상률, 물가상승률, 노조조직률, 실업률 1%당 GDP 대비 실업급여 및 실업부조 지출 비율을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18개 국가들의 8년간 GDP 성장률 평균은 2.67%이고, GDP 성장률이 높은 국가는 아일랜드, 스페인, 핀란드, 호주, 스웨덴 등이며, 낮은 국가는 이태리, 독일, 일본, 덴마크, 프랑스 등이다. 18개 국가들

의 8년간 임금인상률 평균은 1.18%이며, 임금인상률이 높은 국가는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아일랜드, 캐나다 등이고, 낮은 국가는 스페인, 벨기에, 이태리, 독일, 일본 등이다. 18개 국가들의 8년간 물가상승률 평균은 2.04%이고, 물가상승률이 높은 국가는 아일랜드, 스페인, 호주, 미국, 이태리, 캐나다 등이며, 낮은 국가는 일본, 스위스, 스웨덴, 영국, 독일, 핀란드 등이다.

18개 국가들의 8년간 노조조직률 평균은 34.99%이며, 노조조직률이 높은 국가는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벨기에 등이고, 낮은 국가는 프랑스, 미국, 스페인, 일본, 스위스 등이다. 18개 국가들의 8년간 실업률 1%당 GDP 대비 실업급여 및 실업부조 지출 비율 평균은 0.18%이고, 실업률 1%당 GDP 대비 실업급여 및 실업부조 지출 비율이 높은 국가는 네덜란드, 덴마크, 오스트리아, 스위스, 독일 등이며, 낮은 국가는 영국, 미국, 이태리, 일본, 캐나다 등이다. 일반적으로 실업률 1%당 GDP 대비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지출 비율이 높은 국가들은 실업률 1%당 GDP 대비 실업급여 및 실업부조 지출 비율도 높으며, 실업률 1%당 GDP 대비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지출 비율이 낮은 국가들은 실업률 1%당 GDP 대비 실업급여 및 실업부조 지출 비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통제변수에 대한 각국의 8년(2000-2007년) 평균

	GDP 성장률			임금인상률			물가상승률			노조조직률			GDP 대비 실업급여 및 실업부조 비율		
	평균	최대	최소	평균	최대	최소	평균	최대	최소	평균	최대	최소	평균	최대	최소
호주	3.41	5.00	2.40	1.48	3.06	-1.29	3.19	4.50	2.30	22.20	24.70	18.50	.1155	.1397	.0932
오스트리아	2.34	3.70	0.50	0.87	4.32	-0.91	2.03	2.70	1.40	34.29	36.60	30.80	.2599	.3056	.2286
벨기에	2.16	3.80	0.70	0.17	1.71	-1.18	2.09	2.80	1.60	51.86	54.10	49.50	.1821	.1915	.1747
캐나다	2.86	5.20	1.80	1.81	3.75	-1.29	2.31	2.70	1.90	27.98	28.50	27.30	.0987	.1111	.0912
덴마크	1.86	3.50	0.40	1.70	2.92	0.10	2.05	2.90	1.20	71.94	74.20	69.10	.3350	.3527	.2579
핀란드	3.51	5.30	1.70	1.96	3.88	0.27	1.62	3.00	0.20	72.95	75.00	70.30	.1675	.1759	.1522
프랑스	2.14	4.10	1.10	1.13	2.44	0.32	1.79	2.10	1.50	7.90	8.20	7.60	.1579	.1811	.1333
독일	1.59	3.60	-0.20	0.24	0.78	-0.24	1.61	2.30	1.00	22.40	24.60	19.90	.2159	.2512	.1476
아일랜드	5.95	9.40	4.40	1.85	4.27	-0.39	4.00	5.60	2.20	35.81	38.40	32.40	.1745	.1848	.1600
이태리	1.49	3.90	0.10	0.18	1.91	-1.25	2.33	2.80	1.80	33.86	34.80	33.20	.0763	.1015	.0505
일본	1.73	2.90	0.20	0.35	1.95	-1.19	-0.32	0.2	-0.90	19.64	21.50	18.30	.0960	.1191	.0846
네덜란드	2.21	3.90	0.10	0.90	2.08	-0.27	2.20	4.20	1.20	21.21	22.90	19.30	.4770	.6423	.3792
노르웨이	2.42	3.90	1.00	3.14	4.80	1.19	1.86	3.10	0.50	54.55	55.10	53.70	.1703	.2048	.1471
스페인	3.61	5.00	2.70	-0.26	0.99	-1.87	3.23	3.60	2.80	15.46	16.70	14.20	.1417	.1687	.1198
스웨덴	3.22	4.60	1.40	1.99	3.65	0.69	1.49	2.40	0.40	76.70	79.10	70.80	.1646	.2286	.1098
스위스	2.16	3.60	-0.20	1.13	4.44	-1.62	0.95	1.60	0.60	19.81	20.80	18.70	.2255	.2744	.1676
영국	2.75	3.90	2.10	1.79	4.15	-0.37	1.57	2.30	0.80	29.06	30.20	27.90	.0432	.0556	.0302
미국	2.60	4.10	1.10	0.86	2.24	-0.23	2.79	3.40	1.60	12.21	12.80	11.50	.0667	.1021	.0471
평균	2.67			1.18			2.04			34.99			0.18		

5.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 실업률 영향 분석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이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①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② 6개월 이상 장기간실업률에 미치는 영향 분석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실업률에 대한 영향 분석

<표 6>의 모델1은 시간더미와 국가더미 변수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의 분석결과이며, 모델2는 시간더미와 국가더미를 포함한 경우의 분석결과이다.

먼저 모델1의 분석결과(<표 6>의 좌측)를 살펴보면, 적극적노동시장정책 뿐만 아니라 통제변수인 경제성장률, 임금인상률, 물가상승률, 노조조직률, 실업급여 및 실업부조 모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노동시장정책, 경제성장률, 임금인상률은 실업률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물가상승률, 노조조직률, 실업급여 및 실업부조는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적극적노동시장정책, 경제성장률, 임금인상률이 실업률을 낮추도록 영향을 미치며, 물가상승률, 노조조직률, 실업급여 및 실업부조는 실업률을 높이도록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적극적노동시장정책($\beta = -.843$), 실업급여 및 실업부조($\beta = .382$), 노조조직률($\beta = .327$), 임금인상률($\beta = -.256$), 물가상승률($\beta = .199$), 경제성장률($\beta = -.173$) 순으로 높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이 이론 및 선행연구와 일치하게 실업률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이 직업훈련을 통한 생산성 향상, 직업훈련 및 구직서비스를 통한 구인과 구직의 일치도 증가, 고용보조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으로 실업의 감소를 초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모든 통제변수가 이론 및 선행연구와 일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임금인상률은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체로 경제성장률이 높은 국가들의 경우 임금인상률이 높으며, 임금인상률이 경제여건의 이러한 긍정적인 면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실업률을 감소하도록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아일랜드, 핀란드, 스웨덴, 캐나다 등은 경제성장률이 높으며 임금인상률이 높고, 이태리, 독일, 일본 등은 경제성장률이 낮으며 임금인상률이 낮은 것은 이러한 해석을 어느 정도 뒷받침해 주고 있다.

다음으로 모델2의 분석결과(<표 6>의 우측)를 살펴보면, 적극적노동시장정책, 경제성장률만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며, 실업부조 및 실업급여는 낮은 유의수준($p < 0.1$)에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간과 국가의 특수한 상황을 통제함으로써 실업률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쳤던 임금인상률, 물가상승률, 노조조직률이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적극적노동시장정책, 경제성장률은 실업률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실업급여 및 실업부조는 정적으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적극적노동시장정책, 경제성장률이 실업률을 낮추도록 영향을 미치며, 실업급여 및 실업부조는 실업률을 높이도록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적극적노동시장정책($\beta = -.600$), 실업급여 및 실업부조($\beta = .249$), 경제성장률($\beta = -.113$) 순으로 높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이 실업률을 감소하도록 영향을 미친 것은 앞에서 논의한 것과 같은 논리에 의해 설명할 수 있다. 한편 통제변수 중 경제성장률은 실업률을 감소하도록 영향을 미치며, 실업급여 및 실업부조는 실업률을 증가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제성장률이 고용창출을 통해 실업을 감소시키며, 실업급여 및 실업부조가 노동자의 근로의욕을 약화시켜 실업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지지해주고 있다.

<표 6> 실업률 영향요인 분석(1)

독립변수	모델1(종속변수: 실업률)				모델2(종속변수: 실업률)			
	B	β	t	t유의도	B	β	t	t유의도
상수	6.395		12.022	.000	5.402		3.728	.000
적극적노동시장정책	-17.358	-.843	-5.000	.000	-12.358	-.600	-5.207	.000
경제성장률	-.247	-.173	-2.185	.031	-.161	-.113	-2.048	.043
임금인상률	-.391	-.256	-3.352	.001	-.081	-.053	-1.555	.123
물가상승률	.381	.199	2.525	.013	.139	.073	1.322	.189
노조조직률	.033	.327	3.851	.000	.025	.242	.446	.657
실업급여 및 실업부조	7.700	.382	2.438	.016	5.018	.249	1.850	.067
시간더미	처리하지 않았음				처리했음			
국가더미	처리하지 않았음				처리했음			
	수정 $R^2 = .336$ F=11.554 F유의도=.000				수정 $R^2 = .918$ F=54.049 F유의도=.000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구체적 프로그램인 구직서비스, 직업훈련, 고용보조가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표 7>의 모델1은 시간더미와 국가더미 변수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의 분석결과이며, 모델2는 시간더미와 국가더미를 포함한 경우의 분석결과이다.

먼저 모델1의 분석결과(<표 7>의 좌측)를 살펴보면,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 구직서비스, 직업훈련과 통제변수인 경제성장률, 임금인상률, 노조조직률, 실업급여 및 실업부조가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서비스, 직업훈련, 경제성장률, 임금인상률은 실업률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노조조직률, 실업급여 및 실업부조는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직서비스, 직업훈련, 경제성장률, 임금인상률이 실업률을 낮추도록 영향을 미치며, 노조조직률, 실업급여 및 실업부조는 실업률을 높이도록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구직서비스($\beta = -.788$), 직업훈련($\beta = -.577$), 실업급여 및 실업부조($\beta = .467$), 노조조직률($\beta = .289$), 경제성장률($\beta = -.195$), 임금인상률($\beta = -.171$) 순으로 높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구직서비스, 직업훈련이 이론 및 선행연구와 일치하게 실업률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직서비스가 구인과 구직의 일치도를 높이고, 직업훈련이 노동수요에 맞는 기술 수준을 습득하도록 하거나 노동력 생산성을 증가시켜 실업의 감소를 야기했다는 주장을 지지해주고 있다. 한편 대부분 변수들이 이론 및 선행연구와 일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임금인상률은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앞에서 기술한 것과 같은 논리에 의해 설명할 수 있다.

다음으로 모델2의 분석결과(〈표 7〉의 우측)를 살펴보면, 직업훈련, 고용보조, 실업급여 및 실업부조가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며, 경제성장률은 낮은 유의수준($p < 0.1$)에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과 국가의 특수한 상황을 통제함으로써 실업률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쳤던 구직서비스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고용보조는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과 국가를 통제한 경우 구직서비스가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게 나타난 것은 네덜란드, 덴마크, 일본, 영국 등의 국가에서 GDP 대비 구직서비스 비율이 높으면서 실업률이 낮은 국가들이 많은데 국가를 통제함으로써 이러한 국가들에서 나타난 효과가 통제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통제변수 중 실업률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쳤던 임금인상률, 노조조직률이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었다. 직업훈련, 고용보조, 경제성장률은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실업급여 및 실업부조는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업훈련, 고용보조, 경제성장률이 실업률을 낮추도록 영향을 미치며, 실업급여 및 실업부조는 실업률을 높이도록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고용보조($\beta = -.445$), 실업급여 및 실업부조($\beta = .226$), 직업훈련($\beta = -.224$), 경제성장률($\beta = -.097$) 순으로 높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실업률 영향요인 분석(2)

독립변수	모델1(종속변수: 실업률)				모델2(종속변수: 실업률)			
	B	β	t	t유의도	B	β	t	t유의도
상수	7.483		15.369	.000	4.949		3.315	.001
구직서비스	-59.521	-.788	-7.647	.000	-8.538	-.113	-.964	.337
직업훈련	-34.855	-.577	-6.206	.000	-13.507	-.224	-2.808	.006
고용보조	3.184	.076	.640	.523	-18.674	-.445	-3.146	.002
경제성장률	-.277	-.195	-2.781	.006	-.138	-.097	-1.739	.085
임금인상률	-.261	-.171	-2.510	.013	-.072	-.047	-1.365	.175
물가상승률	.194	.102	1.450	.149	.137	.072	1.321	.189
노조조직률	.029	.289	3.628	.000	.036	.355	.642	.522
실업급여 및 실업부조	9.408	.467	3.508	.001	5.361	.226	2.015	.046
시간더미	처리하지 않았음				처리했음			
국가더미	처리하지 않았음				처리했음			
	수정 $R^2 = .499$ $F = 16.837$ F유의도 = .000				수정 $R^2 = .920$ $F = 52.117$ F유의도 = .000			

2) 장기실업률에 대한 영향분석

<표 8>의 모델1은 시간더미와 국가더미 변수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의 분석결과이며, 모델2는 시간더미와 국가더미를 포함한 경우의 분석결과이다.

먼저 모델1의 분석결과(<표 8>의 좌측)를 살펴보면,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임금인상률이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경제성장률, 실업부조 및 급여는 낮은 유의수준($p < 0.1$)에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노동시장정책, 경제성장률, 임금인상률은 장기실업률에 부적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실업급여 및 실업부조는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적극적노동시장정책, 경제성장률, 임금인상률이 장기실업률을 낮추도록 영향을 미치며, 실업급여 및 실업부조는 장기실업률을 높이도록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적극적노동시장정책($\beta = -.479$), 임금인상률($\beta = -.373$), 실업급여 및 실업부조($\beta = .311$), 경제성장률($\beta = -.142$) 순으로 높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장기실업률 영향요인 분석(1)

독립변수	모델1(종속변수: 장기실업률)				모델2(종속변수: 장기실업률)			
	B	β	t	t유의도	B	β	t	t유의도
상수	3.596		7.685	.000	1.603		1.319	.190
적극적노동시장정책	-8.141	-.479	-2.666	.009	-5.927	-.349	-2.978	.004
경제성장률	-.167	-.142	-1.680	.095	-.083	-.070	-1.255	.212
임금인상률	-.470	-.373	-4.583	.000	-.051	-.040	-1.157	.250
물가상승률	.073	.046	.551	.583	.091	.057	1.029	.306
노조조직률	.009	.110	1.216	.226	.043	.514	.931	.354
실업급여 및 실업부조	5.165	.311	1.859	.065	-1.674	-.101	-.736	.463
시간더미	처리하지 않았음				처리했음			
국가더미	처리하지 않았음				처리했음			
	수정 $R^2 = .214$ $F = 7.490$ F유의도 = .000				수정 $R^2 = .915$ $F = 52.315$ F유의도 = .000			

독립변수인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이 실업률을 감소하도록 영향을 미친 것은 앞에서 논의한 것과 같은 논리에 의해 설명할 수 있다. 한편 통제변수의 경우 대부분 변수들이 이론 및 선행연구와 일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임금인상률은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 논의한 것과 같은 논리에 의해 설명할 수 있다.

다음으로 모델2의 분석결과(<표 8>의 우측)를 살펴보면, 적극적노동시장정책만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과 국가의 특수한 상황을 통제함으로써 실업률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

켰던 경제성장률, 임금인상률, 실업급여 및 실업부조가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었다. 적극적인노동시장정책은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이 장기실업률을 낮추도록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구체적 프로그램인 구직서비스, 직업훈련, 고용보조가 장기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표 9>의 모델1은 시간더미와 국가더미 변수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의 분석결과이며, 모델2는 시간더미와 국가더미를 포함한 경우의 분석결과이다.

먼저 모델1의 분석결과(<표 9>의 좌측)를 살펴보면,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 구직서비스, 직업훈련, 고용보조와 통제변수인 경제성장률, 임금인상률, 실업급여 및 실업부조가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서비스, 직업훈련, 고용보조, 경제성장률, 임금인상률은 실업률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실업급여 및 실업부조는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직서비스, 직업훈련, 고용보조, 경제성장률, 임금인상률이 실업률을 낮추도록 영향을 미치며, 실업급여 및 실업부조는 실업률을 높이도록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구직서비스($\beta = -.769$), 직업훈련($\beta = -.367$), 고용보조($\beta = -.367$), 실업급여 및 실업부조($\beta = .358$), 임금인상률($\beta = -.288$), 경제성장률($\beta = -.174$) 순으로 높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구직서비스, 직업훈련, 고용보조가 이론 및 선행연구와 일치하게 실업률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직서비스가 구인과 구직의 일치도를 높이고, 직업훈련이 노동수요에 맞는 기술수준을 습득하도록 하거나 노동력 생산성을 증가시며, 고용보조가 고용창출을 야기해 실업의 감소를 초래했다는 주장을 지지해주고 있다. 한편 대부분 변수들이 이론 및 선행연구와 일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임금인상률은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앞에서 기술한 것과 같은 논리에 의해 설명할 수 있다.

다음으로 모델2의 분석결과(<표 9>의 우측)를 살펴보면, 직업훈련과 임금인상률이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며, 노조조직률은 낮은 유의수준($p < 0.1$)에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과 국가의 특수한 상황을 통제함으로써 실업률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쳤던 구직서비스, 고용보조, 경제성장률, 실업급여 및 실업부조는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었고, 실업률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노조조직률은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직업훈련과 임금인상률은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노조조직률은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업훈련, 임금인상률이 실업률을 낮추도록 영향을 미치며, 노조조직률이 실업률을 높이도록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노조조직률($\beta = .293$), 직업훈련($\beta = -.196$), 임금인상률($\beta = -.075$) 순으로 높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 중 직업훈련만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볼 때 직업훈련이 실업률 감소에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변수라는 것을 의미한다. 장기적으로 볼 때 직업훈련은 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갖기 위해 필요한 지식·기술을 습득하도록 하며, 이는 개인의 생산성 증가 및 사회전체의 생산성 증가로 이어져 경제성장에 기여하며, 고용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통제변수 중 노조조직률이 실업률을 높이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임금인상과 고용이동의 경직성을 초래해 고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표 9〉 장기실업률 영향요인 분석(2)

독립변수	모델1(종속변수: 장기실업률)				모델2(종속변수: 장기실업률)			
	B	β	t	t유의도	B	β	t	t유의도
상수	4.664		10.842	.000	1.411		1.842	.068
구직서비스	-47.939	-.769	-6.971	.000	-12.188	-.195	-1.536	.127
직업훈련	-18.289	-.367	-3.686	.000	-9.768	-.196	-2.361	.020
고용보조	-12.722	-.367	-2.895	.004	-4.654	-.134	-.872	.385
경제성장률	-.205	-.174	-2.328	.021	-.054	-.046	-.758	.450
임금인상률	-.363	-.288	-3.947	.000	-.095	-.075	-2.066	.041
물가상승률	-.097	-.062	-.822	.413	.092	.058	.980	.329
노조조직률	.002	.025	.298	.766	.024	.293	1.747	.083
실업급여 및 실업부조	5.954	.358	2.512	.013	2.683	.159	1.236	.219
시간더미	처리하지 않았음				처리했음			
국가더미	처리하지 않았음				처리했음			
	수정 $R^2=.393$ $F=12.585$ F 유의도=.000				수정 $R^2=.904$ $F=45.977$ F 유의도=.000			

6. 결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고실업, 장기실업을 경험하고 있다. 실업은 개인적으로 경제적, 심리적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노동인력 상실, 소득불평심화, 정치적 불안 등을 초래한다. 따라서 서구 선진국에서는 1980년대 이후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한국도 1995년 고용보험이 실시되면서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매우 초보적인 단계이며, 거시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이 실업률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도 많지 않다.

본 연구는 OECD 18개국의 8년(2000년-2007년)간 패널자료를 이용한 결합회귀분석에 의해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이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고자 했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은 실업률 및 장기실업률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이 실업률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지지해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이 실업률 감소(또는 고용률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잭맨·피사리데스·사보우리(Jackman, Pissarides and Savouri, 1990), 라야드·닉켈·잭맨(Layard, Nickell and Jackman, 1991), 에스테바오(Estevao, 2007), 강철희 외(200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둘째,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세부 프로그램 중 직업훈련은 실업률 및 장기실업률 감소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업훈련이 노동수요에 맞추어 노동공급을 제공해줌으로서 실업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저숙련 분야나 제조업 분야에서 실적이 된 사람들에게 새로운 성장산업에서 요구하는 기술을 습득하여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직업훈련이 실업률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캄포스와 스케딩거(Calmfors and Skedinger, 1995), 에스테바오(Estevao, 2007) 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셋째, 구직서비스, 고용보조는 부분적으로 실업률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업상담 및 직업알선 등을 통한 구직서비스가 구인과 구직과의 일치도를 높여 재취업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의미하며, 공공부분의 일자리 창출 및 민간부분의 임금보조로 인한 일자리 창출이 대체효과, 전치효과, 자중손실에 의한 일자리 감소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통제변수 중 경제성장률은 실업률 및 장기실업률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성장률이 실업률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경제성장이 고용증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OECD, 1993; 강철희 외, 2001) 결과와 일치한다.

다섯째, 물가상승률, 노조조직률, 실업급여 및 실업부조는 부분적으로 실업률 증가에 영향을 미치며, 임금인상률은 부분적으로 실업률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상승률, 노조조직률, 실업급여 및 실업부조가 실업률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선행연구(Layard, Nickell and Jackman, 1991) 결과와 일치하나, 임금인상률이 실업률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선행연구(OECD, 1993) 결과와 다르다. 이러한 차이는 정확히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경제성장률이 높은 국가들의 경우 임금인상률이 높으며, 이러한 점이 실업률을 감소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한국의 적극적노동시장정책 개선과 관련하여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첫째,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을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2008년 한국의 GDP 대비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지출 비율은 0.20%로 본 연구대상인 OECD 18개 국가들의 평균 0.67%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현대사회는 기술발달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 노동유연성 등으로 평생직장은 사라지고 노동이동성이 많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노동시장 변화에 맞추어 노동공급을 제공하는데 적절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을 통해 마찰적, 구조적 실업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미래 산업구조 변화, 산업별 노동수요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을 체계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노동수요에 맞추어 체계화, 전문화해야 할 것이다.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신기술을 습득하여 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점이다.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산업구조의 개편에 의해 발생하는 실업자에게 새로운 산업에서 요구하는 지식·기술을 습득하여 재취업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지식·기술을 제공해줄 수 있는 직업교육훈련체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직업교육훈련의 전문화를 통해 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에 재취업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본인의 생산성 향상

및 국민경제의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다.

셋째, 공공부분 직업창출과 민간부분 임금보조의 경우 대체효과, 전치효과, 자중손실효과가 적도록 프로그램을 계획·운영할 필요가 있다. 고용보조의 경우 미시적인 면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체효과, 전치효과, 자중손실효과가 커서 사회전체의 거시적인 면에서는 실업률 감소에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고용보조를 통한 실업률 감소를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인데 민간부분 기업에서 쉽게 참여하지 않는 업무 또는 노동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한정하도록 하고, 이러한 일자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구직서비스의 경우 실업률 감소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재실업 예방, 소득불평등 완화, 생산성 향상, 경제성장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구직서비스가 실직자를 노동시장에 연결하는 데만 초점을 맞출 경우 단기적 취업률 향상에는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근로조건이 열악하거나 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지 않는 직업에 취업할 가능성이 많아 재실업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편 취업을 한다해도 근로빈곤층에 머무를 가능성이 많고 사회적으로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또한 개인의 생산성 저하는 사회전체의 생산성 저하, 경제성장 둔화, 실업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실업률 감소 측면뿐만 아니라 재실업 예방, 소득불평등 감소, 생산성 향상, 경제성장 등을 고려한 구직서비스 운영이 요구된다. 따라서 구직서비스를 직업훈련과 연계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OECD 국가 중 18개 국가의 8년간의 자료를 이용하여 적극적노동시장정책과 실업률과의 관계를 양적으로만 분석했기 때문에 각국의 특수한 프로그램들이 실업률 감소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하지 못했다. 한국에서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 구체적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러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철희·김교성·김영범. 2001.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실업 감소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45: 7-39.
- 김형기. 2008.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한 노동시장제도 연구: 영국·독일·덴마크 3국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노동정책연구』 8(3): 93-124.
- 박준식·김영범. 2009.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다양성: 복지국가 유형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81: 188-217.
- 정병석. 2010. “한국 노동시장정책의 평가와 발전방안: 이행노동시장 이론의 활용.” 『노동정책연구』 10(2): 155-185.
- 정희정. 2005. “이행노동시장V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및 실업과 관련된 이행.” 『국제노동브리프』 3(6): 67-74.
- 채구묵. 2011. “OECD 주요국 실업급여제도의 유형별 비교.” 『한국사회학』 45(1): 1-36.
- 통계청. 2011. “성/교육정도별 실업률.”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kostat.go.kr>).

- Calmfors, Lars. 1993. "Lesson from the Macroeconomic Experience of Sweden."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 25-72.
- Calmfors, Lars. 1994. "Active Labour Market Policy and Unemployment: A Framework for the Analysis of Crucial Design Features." *OECD Economic Studies* 22(Spring): 7-47.
- Calmfors, Lars and Per Skedinger. 1995. "Does Active Labour Market Policy Increase Employment?: Theoretical Considerations and Some Empirical Evidence from Sweden." Seminar Paper No. 590. (Stockholm, Institute of International Economic Studies, Stockholm University).
- Carling, Kenneth and Katarina Richardson. 2004. "The Relative Efficiency of Labor Market Programs: Swedish Experience from the 1990's." *Labour Economics* 11(3): 335-354.
- Couch, Kenneth A. "New Evidence on the Long-term Effects of Employment Training Programs." *Journal of Labor Economics* 10(4): 380-388.
- Estevao, Marcello. 2007. "Labor Policies to Raise Employment." *IMF Staff Papers* 54(1): 113-138.
- Gueron, Judith M. 1990. "Work and Welfare: Lessons on Employment Program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4(1): 79-98.
- Jackman, Richard, Christopher Pissarides and Savvas Savouri. 1990. "Unemployment Policies." *Economic Policy* 5(October): 449-490.
- Layard, Richard. 1997. "Sweden's Road Back to Full Employment." *Economic and Industrial Democracy* 18: 99-118.
- Layard, Richard, Stephen Nickell and Richard Jackman. 1991. *Unemployment: Macroeconomic Performance and Labor Market*. Oxford University Press.
- Nickell, Stephen. 1997. "Unemployment and Labor Market Rigidities: Europe versus North America."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1(3): 55-74
- OECD. 1993. "Active Labour Market Policies: Assessing Macroeconomic and Microeconomic Effects." pp. 39-80 in *OECD Employment Outlook*, edited by OECD. Paris: OECD.
- OECD. 2010. *OECD Employment Outlook*. Paris: OECD.
- OECD. 2011. *OECD StatExtracts*. OECD 홈페이지(<http://www.oecd.org>).
- Regner, H. 1997. *Training at the Job and Training for a New Job: Two Swedish Studies*. Swedish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Dissertation Series 29. Stockholm: Swedish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 Skedinger, Per. 1994. "Sweden's Labour Market Policy: A Remedy for Unemployment?" *Vocational Training European Journal* 2: 25-29.

The Effects of Active Labor Market Policy on Unemployment

Chai, Goo-Mook
(Wonkwang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active labor market policy on unemployment by pooled cross-section time series analysis utilizing panel data of 18 OECD countries, and seeks implications for improvements of the Korean active labor market policy.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ctive labor market policy negatively affects unemployment rates. Second, vocational training program among three major active labor market programs has a negative effect on unemployment rates. Third, employment service program and employment subsidy program have partially negative effects on unemployment rates.

The implications for the Korean active labor market policy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expand and systematize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Second, vocational training programs should be systematized and professionalized according to labor demand. Third, employment subsidy programs need to be planned and carried out under the condition of minimizing a substitution effect, a displacement effect and a deadweight loss effect. Fourth, employment service programs need to be developed and carried out under the consideration of not only the reduction of unemployment rates but also the prevention of re-unemployment, mitigation of income inequality and improvement of productivity.

Key words: unemployment rate, active labor market policy, employment service, vocational training, unemployment subsidy.

[논문 접수일 : 11. 04. 24, 심사일 : 11. 05. 09, 게재 확정일 : 11. 06. 01]